총선 이후 바람직한 노사 관계를 기대하며

최근 한국 정치·경제의 상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 불안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을 실감나게 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총선까지 이어진 정국 불안은 한국 경제가 제 궤도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구나 총선이 끝난 지금도 정국 안정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총선 결과 여당의 국회 과반수 확보와 진보 정당의 원내 진출이라는 변화된 정치 환경이 우리에게 새로운 불확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진입한지 오래인데 반하여,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표 상으로 경기는 이미 2003년 3/4분기중 바닥을 쳤지만,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수 부문의 회복 속도가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디커플링 현상보다 더 중요한 점은 현재의 경기 부진이 단순한 경기 변동상의 현상이 아니라 경제 내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경제 구조는 근본적으로는 민간 주체들의 투자 및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투자는 많은 부분이 정치 및 정책적인 여건에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정치가 불안정할수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투자에 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은 집행보다는 유보 쪽으로 기울게됨은 자명한 이치이다. 최근의 정치 및 사회 불안이 이러한 투자 부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또 다른 축인 소비 부문의 부진과 더불어 경제 침체를 유발시켰다. 일부에서는 총선이 끝났으며 조만간 탄핵 정국도 어떤 식으로든 결말이 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낙관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한국 경제를 바라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와 같은 낙관론에 가장 큰 힘으로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 것이 새롭게 변화된 정치 환경이다. 원내에 진출한 각 정당이 내세운 경제 정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표현의 차이 일뿐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것은 잘사는 한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심지어는 민주노동당의 17대 총선 공약을 검토해 보면 한국 경제에 대한 당면 과제로 공히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들고 있다. 따라서 향후 경제의 큰 정책 기조상 커다란 변화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시적이지만, 경제의 전체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부문에서의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이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하지만 재벌 규제 정책, 사회 복지 등 분배 쪽에 중심을 둔 정책이 강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사용자들의 대항권이 약화되어 노동 쟁의가 증가할 가능성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노사 문화는 그동안의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양보와 타협의 원리가 주도하는 선진적인 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나 당장은 새로운 정치 환경 변화에 노조와 기업이 적응해 나가는 데에 많은 진통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비록 진보 정당이 원내 진출에 성공하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진 젊은층의 국회의원 당선 비율이 높다고 하나,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노사간의 모든 문제가 제도권 안에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쩌면 그러한 한계성에 많은 근로자들이 실망함에 따라, 오히려 단위 사업장별로 분규가 증가할 수도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하는 민주노동당의 대표성에 대한 노-노 간 갈등 양상이 전개될 수도 있다. 어쩌면 기존의 2차원적인 노사 관계가 여러 복잡한 요인들로 아무도 풀어 헤치지 못할 엉켜버린 실타래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경기가 좋건 나쁘건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대립적인 노사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성이다. 그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립적인 갈등 구조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실천의 괴리는 노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소득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에도 똑같은 문제가 존재한다. 총선 이후 한국 경제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이러한 여러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선 사회 구성원들은 다른 사고를 가진 다양한 계층들을 존중하고, 이질성을 인식하며, 사회 제도 내에서 공통의 가치관과 이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노력들이 어느 정도의 성과로 가시화될 때에만 한국 경제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주원 선임연구원 juwon@hri.co.kr ☎ 3669-4030